

태양광 수익 주민 공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내년부터 매년 500곳 조성…법정부 추진단 신설 국비 5500억원 투입해 에너지 자립·소득 창출

마을 내 농지나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소를 운영해 창출한 수입을 마을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전국에 확산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행안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을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직접 주도해 마을 내 유류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에너지

신설된다.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나온 수입

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그간 개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한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을 법정부 차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법정부 추진단으로 가칭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

와 지방병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며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를 두고 주민 사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환경청, 지역별 유관기관 등과 협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세제 제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익자를 제공한다.

지역농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마을공동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주민의 자부담분 지원 등

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의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마을 3만8000여 개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약 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약 5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대한상의 방문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청래 대표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 '내란재판부 설치 2심부터' 수정안 마련키로

추천위 외부관여 배제하기로 12·3 계엄사태 2차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현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관련 법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수정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명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부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상방·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의 결과까지 분석한 뒤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 심우

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명고속도 노선변경 의혹 등이 조사범위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종합특검법안 처리는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 재로선 '그렇다'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출범

서동욱 의원, 위원장 선출 "공공 개발 이익은 도민에게"

전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돼 온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본격적으로 들어다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신대·선월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된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집중 문제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공공성 확보 미흡·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목표로 활동할 예

정이다.

서동욱 위원장은 "순천 신대·선월지구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추진된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도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특별위원회 출범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근본적으로 되짚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며 "공공이 관여한 개발사업에

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공공으로 환원 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신대·선월지구를 비롯한 전남도 개발사업 전반의 이의 환수 실태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또한 대표 박의한 '전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택지 조성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 적정성 점검을 비롯해 개발이익 산정과 환수의 타당성 검토,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점검, 전남도 개발이익 환수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서동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진남 부위원장(순천1), 강정일(광양2), 한준옥(순천2), 신민호(순천6), 김정희(순천3), 김정이(순천8), 최동익(비례), 정영균(순천1), 한숙경(순천7)의 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등 3개 분과로 구성, 각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자동차 제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공장 실증 지원'을 2027년 신규 국비로 제안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AIDV) 산업 동향' 기조발표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이 자동차의 주행뿐 아니라 편의·안전·감성 분야까지 사

용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 이승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광주 AIDX 산업 방향'에 대한 기조발표에서 단순공정 위주의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구조를 분석하며 제조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광주시가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AIDV) 기술 확장에 박차를 기울여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원·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